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법무사 2차 시험대비

☆ 과목별
비법자료 ☆

목표는 최단기 합격!

2023년 합격을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대캠퍼스

합격의법학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70m

서울 관악구 관악로17길 3 서진빌딩 2층

합격의법학원 02-888-3300 서울대캠퍼스 ARS ②

2차 시험과목

구 분	제 2 차 시 험 (배 점)
제 1 과목	민법(100)
제 2 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2차 시험대비

과목별 비법자료

민법

이광섭 법무사



법무사 2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4
우선 정리해야 할 중요부분	6
법무사 2차(주관식) 민법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6

민법

김중연 강사



[1] 최근 5개년 법무사 2차 민법 기출분석	9
[2] 최근 5개년 법원행시 2차 민법 기출분석	10
[3] 최근 3개년 주요쟁점별 민법 핵심판례의 정리	11
[4] 최근 5개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분석	21
[5] 최근 5개년 법원행시 2차 민사소송법 기출분석	22
[6] 최근 3개년 주요쟁점별 민사소송법 핵심판례의 정리 ..	23

형법

이재영 법무사



2차 시험을 위한 형법 공부방법	33
이재영 법무사가 알려주는 2차 형법 시험경향	36

법무사 2차 민 법 기출문제 분석

- 제 1회(1992년):** 채권담보방법(단문), 관습상법정지상권(단문),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단문)
- 제 2회(1994년):** 채권자대위권(단문), 친족법, 상속법 주요개정내용(단문)
- 제 3회(1996년):**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효력(단문), 임대차종료 후 법률관계(준case)
- 제 4회(1998년):** 부동산시효취득의 요건과 효과(단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가부(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 등의 피담보 채권변제와 관련-case)
- 제 5회(1999년):** 일괄경매청구권(단문), 미성년자 법률행위관련 무효, 취소, 해제 등(준case)
- 제 6회(2000년):** 이해상반행위, 무권리자 처분 등(준case), 계약금과 위약금약정(준case)
- 제 7회(2001년):** 변제공탁의 의의, 성질, 요건, 효과(단문), 채권자취소권(case)
- 제 8회(2002년):** 상속결격과 상속분 계산(case),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case)
- 제 9회(2003년):** 임차권의 대항력, 관습상법정지상권, 부당이득청구 등(case), 등기청구권의 의의, 발생원인, 성질과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미(단문)
- 제10회(2004년):**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 특정채권담보 근저당권 가부, 제366조 법정 지상권 등(case), 상계(단문)
- 제11회(2005년):** 소멸시효중단(단문), 이행지체와 해제권 발생요건(단문)
- 제12회(2006년):** 해제효과(원상회복), 위약금약정, 제548조 제1항 단서 등(case), 연대보증 관련 상속, 상속포기, 구상권, 1인에 생긴사유 효력 등(case)
- 제13회(2007년):** 변제공탁(case), 채권양도 대항요건, 채권양도와 채무자승낙 등(준case)
- 제14회(2008년):** 채권자취소(case), 주택임대차(차임 등 공제항변,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시 공제항변, 동시이행항변 등 관련 case)
- 제15회(2009년):** 해제효과와 제548조 제1항 단서(case), 매매계약 당사자, 부동산공동매수, 계약명의신탁 관련 (case)
- 제16회(2010년):** 임차권의 대항력(case), 제565조 약정해제, 이중매매에 있어 특정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목적 채권자취소 와 채권자대위 성부 관련 case)
- 제17회(2011년):** 부진정연대채무(case), 계약명의신탁(case)
- 제18회(2012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간, 중단, 연장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case),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양도와 연대보증채권 행사 가부(case), 변제충당(case), 부동산점유취득시효(case)
- 제19회(2013년):** 유치권(case), 임차권 지위강화 목적 전세권설정(case)
- 제20회(2014년):** 도급과 관련 유치권, 담보책임 등(case), 공유와 관련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그에 따른 점유할 권리로서

법정지상권, 취득시효 등 및 대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임대인인 건물공유자의 보증금반환의무 성질 등 (case)

제21회(2015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 대항력, 이행인수, 민법 제629조 제2항 등 (case), 경매법원이 선의 매도인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양자간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 (case)

제22회(2016년): 주택(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case),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이전 부기등기말소, 무효인 가등기 유용, 채권자취소권 등(case)

제23회(2017년): 대여원금청구, 이자청구,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청구 등 (case),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관련 문제 등(case)

제24회(2018년): 등기추정력,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행상반행위 여부, 친권남용 등 (case), 매매 당사자 확정, 성명모용과 표현대리 인정 여부 및 무권대리효과 등(case),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사실 및 이와 관련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 효과, 채권자대위권과 관련 동시이행항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사실과 민법 제405조 제2항과 관련 법정해제 인정 여부 등(case)

제25회(2019년): 담보가등기 관련 문제(case), 건축도급에서 소유권 귀속문제, 미등기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 가부(직접, 대위),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항변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항변 가부, 민법 제666조와 관련 공사대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도급인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case)

제26회(2020년):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case), 소멸시효 관련 문제(case), 금전채권 가압류 (case),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금 청구의 요건사실(case)

제27회(2021년): 채무변제와 관련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성질 및 효과(case), 압류가 제한되는 임금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수인의 임금 직접청구가능 여부(case), 채권양도금지특약과 관련 채권양수인 및 그 전득자의 보호 여부(case), 상속결격 및 상속포기와 관련 상속인의 범위(case),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속방법(case), 금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및 협의분할 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case)

제28회(2022년): 부동산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 건물의 철거청구, 토지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 여부(case),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할(case), 대여금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송의 대위소송의 인정 여부(case),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case), 임차인의 유익상환청구권의 내용(case),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인정 여부(case),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case), 임차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부분 뿐만 아니라 임차 외 부분까지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증명책임(case),

우선 정리해야 할 중요부분

(2023년 법무사 2차 민법 시험 대비)

1. 채권총론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예정), <u>채권자대위</u> , <u>채권자취소</u> , 부진정연대채무, <u>채권양도</u> , 변제자대위, <u>상계</u>
2. 채권각론	<u>동시이행항변</u> , <u>해제</u> , <u>이중매매</u> , <u>임대차</u> , <u>부당이득</u>
3. 물권법	<u>취득시효</u> , <u>공동소유</u> , <u>명의신탁</u> , <u>법정지상권</u> , <u>전세권</u> , <u>저당권</u> (공동저당 유의!)
4. 민법총칙	<u>비법인사단</u> , <u>허위표시의 제3자</u> , <u>착오</u> , 무권대리, <u>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u> (유동적 무효), <u>소멸시효</u> (응소와 시효중단, 소멸시효포기)

법무사 2차(주관식) 민법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1차(객관식) 시험을 통과하고 이어서 법무사 2차(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사 2차(주관식) 시험은 두 번의 기회(동차, 기득권)가 주어지는데, 두 번 모두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첫 번의 기회를 단지 조언으로만 참여한다면 이 후 수험생활에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학습방법이 필요한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라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법의 중요성

민법은 법무사 2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관상으로는 100점이지만 다른 2차 과목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라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무사 2차 과목 중에서 중요하고도 먼저 시작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다만,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그 정리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정리되지 않으며 시간 투자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하루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정리하되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출문제 정리(출제 경향 파악)

법무사 시험은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인데, 우선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출제문제의 경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특히 최근 문항수가 늘어나 10개 내외이므로, 시간안배에 유의 해야함). 기출문제 패턴을 보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최소 5개년 정도), 다음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시 순으로 풀어봅니다. 이후 시간이 되면, 최근 3개년 정도의 변호사시험문제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4. 판례 정리

기출문제와 관련 출제영역이 확인되면 관련부분의 중요판례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1차와 달리 2차의 경우에는 단지 판결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도 함께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이 좀 힘든 작업이고 합격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반복적 학습

기출문제도 확인하고 판례도 정리되었으면, 다음으로는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반복적 학습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나, 민법은 다른 과목 보다 특히 사례해결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니 판례를 단순 암기하기 보다는 사고하고 또 사고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판례의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왜?’ 라는 물음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2차는 누가 뭐래도 실제로 모의고사를 통하여 답안연습을 해 봐야 합니다.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실전에서도 유리합니다. 답안 작성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고, 또한 쓸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되므로 자연 암기분량도 정해지게 됩니다. 적어도 학원 2개 순환 모의고사 정도를 연습해 볼 것을 권합니다.

6. 마치며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사 시험도 쉽지만은 않은 시험입니다. 다만 목표를 정하였으면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한번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 이광섭 법무사』

“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

1차 시험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2차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근 5개년 법무사, 법원행시 민법, 민사소송법 기출쟁점과 기출 된 판례를 제외한 최근 3개년 내에 주요쟁점별 주의깊게 봐두어야 하는 판례**를 민법의 경우에는 채권총론과 물권법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판력과 병합소송 중심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동차 학습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출분포를 통하여 어느 영역에 집중 학습을 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와 달리 2차의 특징은 쟁점의 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타는 모두에게 불의타가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 외에 더 많은 판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1. 민법 판례 230선 특강]과 구체적인 답안작성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2. 민법 답안작성 특강], [3. 민사소송법 체계 잡기 특강]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최근 5개년 법무사 2차 민법 기출분석

구분	문항별 기출 영역 및 주요 쟁점
2018	[1문 : 민법총칙]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행상반행위 여부 / 친권남용 등 / 성명모용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2문 :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에 따른 법원 판단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행사 가부 / 법정해제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1문 : 물권법] 가등기 담보권(권리귀속절차 등) [2문 : 채권총론 및 채권각론]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문제 /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법적 지위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 가부 /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와 사해행위
2020	[1문 : 물권법]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매수인의 법적지위,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일괄경매에 따른 배당금액 / 소멸시효 [2문 : 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강제경매에 따른 동일소유 시기 /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2021	[1문 : 채권총론] 채무의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 압류가 제한되는 임금채권의 양도 및 직접 청구 가부 /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문 : 상속법] 상속결격(낙태) 및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범위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방법과 범위 / 금전채무의 상속재산분할 가부 및 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와의 관계
2022	[1문 : 물권법] 소수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행사 가부 [2문 : 채권각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부

[2] 최근 5개년 법원행시 2차 민법 기출분석

구분	문항별 기출 영역 및 주요 쟁점
2019	[1문 : 민법총칙 및 물권법]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제방안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의 판단시점 / 부실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2문 : 물권법 및 채권총론]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에 따른 배당금액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사해행위 여부 /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2020	[1문 : 채권총론]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계산 /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 /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와의 경합 [2문 : 물권법] 담보지상권과 제256조 단서의 문제 / 지상권과 저당권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
2021	[1문 : 물권법과 채권총론] 유효한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제한 [2문 : 채권총론]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인정 여부 /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상권의 취득 여부 /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부
2022	[1문 : 민법총칙 및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소멸시효의 완성과 권리남용 /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에 따른 법률관계(채권의 준점유자) / 무단인출행위의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부 [2문 : 물권법]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2023	[1문 : 민법총칙 및 채권각론] 소멸시효와 해제 / 임치물의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 부담부 증여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2문 : 물권법] 점유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소유권 취득 방안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취득시효 가부

[3] 최근 3개년 주요쟁점별 민법 핵심판례의 정리

01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의 관계

★★★

[대판 2022.4.14. 2019다292736, 292743]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①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②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02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손해배상 또는 해제의 인정 여부)

★★★

[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①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②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03 도급인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대판 2018.11.29. 2015다19827]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4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일부변제의 효력

★★★

[대판 2018.3.22.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판례]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소액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상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대판 2012.2.9. 2009다72094).

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양도제한의 법리

★★★

[대판 2018.7.12. 2015다36167]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6 제495조 상계적상 예외가 보증금채무의 공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대판 2016.11.25. 2016다211309]

상계적상의 예외를 보증금의 공제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07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미등기매수인과의 법률관계

★★★

[대관 2022.9.29. 2018다243133, 243140]

1.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원시취득자와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미등기매수인과의 법률관계)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08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

[대판 2021.9.9.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1)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다.

(2)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고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은 그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판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한다(2022.6.9. 2020다208997).

09 허위표시에 기초한 전세권에 악의의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대판 2021.12.30. 2018다268538]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10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률관계

★★★

[대판 2021.12.16. 2021다247258]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상보증인 A 소유 X 건물 (경매대가 6억)	물상보증인 A 소유 Y 건물 (경매대가 15억)
1순위	B(저당권) - 채권액 7억	
2순위	丙(전세권자) - 채권액 2억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시배당) 그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X 건물의 소유권이 채무자 甲에게 이전 (경매대가 6억)	물상보증인 A 소유 Y 건물 (경매대가 15억)
1순위	B(저당권) - 채권액 7억	
2순위	丙(전세권자) - 채권액 2억	

- ①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에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X 건물의 소유권이 채무자 甲에게 이전 (경매대가 6억)	Y 건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 (경매대가 15억)
1순위	B(저당권) - 채권액 7억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乙이 B에게 7억 원을 변제)	
2순위	丙(전세권자) - 채권액 2억	

결국 물상보증인 A의 부동산이 채무자 甲(X 건물)과 제3취득자 乙(Y 건물)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취득자 乙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여 X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6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乙과 丙은 각각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후순위전세권자 丙의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X 건물의 경매대가는 6억 원이고, Y 건물의 경매대가는 15억 원이므로, 공동저당권자 B는 [X 건물에서 $7억 \times 6/21 = 2억 원$], [Y 건물에서는 $7억 \times 15/21 = 5억 원$]을 각각 배당받았을 것인바, X 건물의 경매대가 6억 원 중 후순위전세권자 丙은 2억 원에 대하여 제3취득자 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잔액 4억 원을 제3취득자 丙이 배당을 받을 것이다.

[4] 최근 5개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분석

구분	문항별 기출 영역 및 주요 쟁점
2018	[1문]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2문]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기관력의 시적범위(정기금변경의 소)
2019	[1문] 사문서의 진정성립, 상계의 기관력, 소제기전 사망과 추후보완항소 및 소송수계신청,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2문]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의 처리방법, 예비적 병합에서 항소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예비적 병합에서 항소에 따른 주위적 청구의 인낙 여부
2020	[1문]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에서 관할의 적법 여부 [2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추가와 중복소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취소소송과 중복소송 및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2021	[1문]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정정신청의 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특별항고 가부 [2문] 기일의 해태(쌍불취하)와 기일지정신청
2022	[1문]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가부, 파기환송에 따른 대리권 부활 여부,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재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 여부 [2문] 비공개정보 관련 문서제출명령의 적법 여부, 자기이용문서 관련 문서제출명령의 적법 여부,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5] 최근 5개년 법원행시 2차 민사소송법 기출분석

구분	문항별 기출 영역 및 주요 쟁점
2019	[1문] 항소취하합의 위반에 따른 구제방안(학설과 판례 각각 나누어 서술할 것), 항소심에서 교환적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2문] 소제기 후 소장부분 송달 전 당사자 사망에 따른 조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에 따른 조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구제방안, 단체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2020	[1문]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과 즉시항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당사자적격, 권리자백(선결적 법률관계),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문] 소취하를 기망 내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소금지원칙, 소송고지와 참가효, 제65조 후문과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의 심급 제한 가부, 소송절차 이의권
2021	[1문]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에 따른 법원의 조치 및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확정을 잘못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의 상실에 따른 조치 및 간과판결의 효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소취하의 효력 [2문]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쌍방결석의 법적 효과, 반소의 허용요건(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22	[1문]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교화적변경과 항소취하의 효력, 약정불이행과 재소금지원칙 [2문] 소송대리인 선임 후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에 따른 조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정기금변경의 소), 상계의 기판력
2023	[1문] 기판력의 시적범위, 청구인낙의 실체법상 효과, 상계항변과 별소제기 가부(중복소송), 상계항변과 기판력 [2문] 변론주의와 석명권, 자백간주

[6] 최근 3개년 주요쟁점별 민사소송법 핵심판례의 정리

최신판례 01 2020. 1. 16. 2019다247385

1.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듦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최신판례 02 2023. 3. 13. 2022다286786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사실관계] 1)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1. 4. 1.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기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22. 8. 9. 항소심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① 단순 이행 청구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2008년 임대차계약이 동일함을 전제로, 2008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인도를 구하였으며(이하 ‘제1 예비적 청구’라 한다), ③ 장래이행의 소로서 2024. 4. 1.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이하 ‘제2 예비적 청구’라 한다). 4) 피고는 2022. 8. 11.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①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3. 31.까지 존속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②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3. 31.까지 존속하고,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예정일 뿐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어서 장래이행의 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원고는 2022. 8. 18.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8. 26.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그에 관한 별다른 추가 심리도 없이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6)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요지]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이행기가 2024. 4. 1. 도래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할 때까지 약 2년 동안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만

료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 내용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소하였을 뿐 제2 예비적 청구는 쟁점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다툴 적은 없다. 또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03 2016. 11. 10. 2014다54366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원고는 2008. 9. 10.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인(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분 등을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도 소외인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소송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고, 2013. 9. 3.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 제3채무

자인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로서 관련 소송에서 수령한 서류를 본인인 피고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신판례 04 2022. 10. 27. 2022다241998

1.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2.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의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최신판례 05 2020. 5. 14. 2019다261381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적 청구권의 실제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건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최신판례 06 2020. 9. 3. 2020다210747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신판례 07 2020. 10. 29. 2016다35390

1.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①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신판례 08 2021. 5. 7. 2020다292411

1.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

2.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인지 여부(적극)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예)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최신판례 09 2022. 4. 14. 2020다224975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분리 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신판례 10 2022. 7. 28. 2020다231928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최신판례 11 2022. 10. 14. 2022다241608, 241615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

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 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차 시험을 위한 형법 공부방법

이재영 법무사

1. 서 언

동일한 출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합격하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시험날짜를 향하여 시간이 흘러갈 수록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인다. 시험이란 것이 한정된 시간에 상대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한 쪽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시간 대비 효율성의 문제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공부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 자체가 하나의 고민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필자의 강의경험과 수험경험에 비추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 주관식 시험의 특성

주관식은 법전만 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을 언제나 안고 살아야 한다. 이는 평소의 학습 과정에서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망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보던 내용이 기억이 안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 전에 봤던 것도 하룻 밤을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즉 보던 것을 보고 또 보고, 쓰던 것을 쓰고 또 쓰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합격선을 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차피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은 포기하고, 기억이 날 것같은 것만에 승부를 걸자.” 는 마인드로 주관식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망각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태도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시험이 다가올 수록 자신감 결여와 집중력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대한 분량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상문제는 준비해야 되며,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상문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합격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험생은 망각을 직시하고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3. 기본서의 정독

만약, 민법 시험에서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라고 답안을 적는다면 출제위원은 과락 점수를 줄지 말지 고민할 것이다. 기본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불상사가 생긴다. 따라서 주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읽기가 필수이다.

기본교재와 관련하여 자신이 읽기 좋은 메인 교재를 정하여 한 권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형법 교재는 구 사법시험 혹은 변호사시험 대비용 기본서를 근간으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판례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법무사시험의 출제 경향과 동떨어진 부분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서를 읽을 때는 정독을 해야 할 부분과 속독으로 넘겨야 할 부분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빨리 파악하여야 시험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독하여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의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 교재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두고 키워드만 보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반복하여야 한다.

4. CASE풀이와 답안작성 연습

‘~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특정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된다 혹은 안된다는 결론만 기억난다면 객관식에는 대응할 수 있어도 주관식 답안을 쓰기는 부족한 지식이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CASE에서 결론이 떠오르면 익히 알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연습지에 초안을 작성해 보기 바란다. 만약 초안을 잡으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초안을 반복해서 작성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다보면 주관식을 대하는 마인드가 상승하고 시간도 점점 단축될 것이다. 초안을 제법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문장으로 표현해서 적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형법 CASE는 ① 기본적인 쟁점의 제시 ② 판례의 태도 ③ 사안의 해결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며, 판결이유에서 등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판례는 그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외우는 것은 비슷한 사례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많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판시하였다.”는 것을 하나의 틀로 생각하고 중요한 판례를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한 반복하여 글로 적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본서를 정독하고 판례숙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된다. 답안 작성시에 발생하는 오류들

을 줄이기 위해서는 답안을 많이 작성해 보고 평가와 지적을 당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요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많이 해보아야 하고 요리책을 100회독 한다고 해서 요리 실력이 그만큼 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글쓰는 솜씨는 글을 많이 적어 보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의고사를 통한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5. 판례와 학설의 암기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 곧 판례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사례에서 어디에 쟁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학설을 활용한다면 학설의 활용가치는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설은 그야말로 쟁점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 학자들간 대립하는 구체적인 학설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판례의 판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례에 대한 암기력 싸움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상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답안지에 잘 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판례 이외에도 관련되는 중요 판례를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고득점의 기회도 높아진다. 꾸준한 답안 작성연습을 통하여 계속된 오류수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답안으로 판례가 현출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어

만약 10시간 동안 공부하여야 할 분량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3시간 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는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실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은 3시간을 어떠한 마인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갈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다고 하여 절대 포기(현실적으로든, 잠재적으로든)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험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하는 것이고 자신보다 훨씬 더 모르는 사람도 과거부터 합격해 왔고 미래에도 합격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집중력을 가져오고 그 집중력으로 결국 합격해 내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영 법무사가 알려주는 2차 형법 시험경향

1. 총론 부분

형법 총론은 모든 범죄의 공통된 요소로서 ① 총설(죄형법정주의) ② 범죄론(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③ 미수론 ④ 공범론 ⑤ 죄수론 ⑥ 형벌론 으로 나뉜다.
법무사 시험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 쟁점 위주로 출제된다는 말이 있으나, 총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총론의 기초지식 없이는 답안 구성의 기본 틀을 만들기도 어려워 지며, 총론상의 쟁점 자체가 출제된 적도 많다. 구성요건론 중 부진정 부작위범의 쟁점은 자주 출제되었으며, 위법성론에 있어서 정당방위 요건, 공범론 중 공동공동정범,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의 성부, 죄수론 중 불가별적 사후행위나 부정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판단은 최근까지도 출제된 쟁점이다.

2. 각론 부분

각론은 ① 재산죄 ② 비재산죄 ③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④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재산죄 부분이다. 따라서 재산죄 부분만큼은 뺄 게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재산죄 중에서도 특히 준강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기본적으로 각론의 출제 문제들은 최신 판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신 판례의 동향을 잘 살펴 해당 범죄의 키워드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략적인 기출문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표시해 드리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

법무사 2차 형법 기출 범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공범 죄수론	재산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제1회				실행의 착수 (논술)				
제2회								위증죄 무고죄
제3회					강도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죄수론	재산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제4회				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죄		공문서 위조	
제5회					횡령죄			
제6회			14세 미만자	공동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죄, 사기죄, 장물죄			
제7회					횡령죄			뇌물죄
제8회				친족상도 례,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9회				인과관계	절도죄	강간치상		공무집행 방해죄
제10회 (2004)	부작위범				공갈죄	업무상 과실치상 살인미수		범인은닉 도피죄
제11회 (2005)		정당 행위				업무방해 낙태죄	사문서 위조죄	
제12회 (2006)		싸움과 정당 방위		반의사불 벌죄	준강도죄 현금카드 사기		간통, 혼인빙자 간음	
제13회 (2007)				공범과 신분	2중양도 담보	존속살해		
제14회 (2008)					2중매매 명의신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죄수론	재산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제 15회 (2009)					횡령죄 (배임, 사기)	주거침입		
제 16회 (2010)					신용카드 범죄 컴퓨터 사용 사기, 장물 취득죄			
제 17회 (2011)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집방
제 18회 (2012)					절도죄 준강도 상해	명예훼손		
제 19회 (2013)	부작위범				절도죄 점유이탈 물횡령죄 강제집행 면탈		실화죄	
제 20회 (2014)				공모공동 정범 공고관계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특수절도 준강도	주거침입		
제 21회 (2015)					준강도 강도치상	상해의 개념		공무집행 방해
제 22회 (2016)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횡령죄 (명의 신탁)			
제 23회 (2017)				예비죄의 종범	사기죄 (보이스 피싱)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죄수론	재산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제 24회 (2018)					배임죄 (대물변제 예약)			범인도피 교사
제 25회 (201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신용카드 범죄	모욕죄		
제 26회 (2020)					고속버스 유실물 사건 배임죄 공갈죄		공문서부 정행사	뇌물죄
제 27회 (2021)					불법영득 의사 전화기 무단사용 강제집행 면탈	강간치상 강제추행	공정증서 원본등 불실기재	
제 28회 (2022)	부작위범 (2013同)				횡령죄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합격의법학원 서울대캠퍼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7길 3

-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버스 이용 시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자가용 이용 시
학원 앞 주차장 이용가능 (요금할인 없음)



합격의법학원 02-888-3300 서울대캠퍼스 ARS ②